

국가는 떠오르고 신자유주의는 사라지는가? 글세...

관련 기사 6~7면

바이든이 내놓은
대북정책 분석

2면

문재인 정부의
여전한 난점들

3~4면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더 우경화하는 노동당 지도부

5면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6~7면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8~9면

국가일자리보장제,
어떻게 볼 것인가

10~11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12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으로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될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트럼프나 오바마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처럼 ‘전부 아니면 전부’ 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과 거리를 두고 대화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도 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말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할 특사가 임명될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5월 5일자)

무엇보다,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중 경쟁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축구로 한미일 고위 관료급 회담이 연이어 성사되고 있다

라는 전략적 문제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하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키우는 한반도 불안정이 근본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한·미·일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하지만,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있다.

4월 28일 바이든은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을 한데 묶어 두 국가의 핵 프로그램이 “큰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엄중한 억제”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외교를 말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억제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외교 면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시도보다 동맹국들과의 외교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5월 5일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런던에서 회담을 해,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을 논의했다. 이 회담 다음에 바로 한·일 외교장관들이 회동했는데, 이 회동은 미국의 축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에 도쿄에서는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담이 예정돼 있고, 6월 4~5일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미·일 3각 협력 강

화를 추진하고 있다. 거기서 북한 ‘위협’ 대응은 유용한 명분이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다.

바이든 정부가 밝히는 북한과의 외교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지만, 억제 면에서는 확실하고 실행되는 게 있다. 일례로,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이 말한 “엄중한 억제”가 핵무기 사용 위협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프레시안》, 5월 6일자)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도 북한에 대해 “조정된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설명

하면서 미국, 동맹국, 현지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적 진전”도 추진한다고 했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력 전진 배치와 강화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세 개의 ‘특정한 역량’을 배치하는 중”인데 그중 하나는 이미 한국에 있고 나머지 두 개도 올해 안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특정한 역량”에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의 성능 개량이 포함돼 있다고 추측한다.

사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알려지면서 북한도 실망감을 드러내 왔다. 5월 2일 북한 외무성은 바이든의 의회 연설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 외교관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든 일괄 타결 방식이든,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좁고 온갖 장애물로 가득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평화 협상들이 성사됐다가 끝내 좌절되는 지난한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말이다. 문재인이 강조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중도에 좌초된 일은 그 최근 사례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동맹 강화와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대북 압박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경쟁 심화와 맞물려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국회 통과 앞둔 ‘가사근로자법’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전주현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치켜세웠다.

일부 가사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오랜 세월 노동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노동’ 관련 첫 법안 제정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던 가사노동자는 코로나19로 처지가 더 나빠졌다. 월 평균 수입이 11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43퍼센트나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지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어 상당수가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코로나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명 송송

하지만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돼도 가사노동자의 처지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 일부 가사노동자의 처지는 약간 개선될 수 있지만,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일부 가사노동자에게 노동

법의 일부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에게만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와 플랫폼 업체는 턱없이 미흡한 ‘가사근로자법’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조차 “약 3300개 정도의 전체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 중 약 10퍼센트 정도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법은 또한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몇 년 새 늘어난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최대 15.5퍼센트까지 수료를 떼거나 4시간짜리 업무를 한두 시간짜리로 전환시켜 노동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진정한 목적

‘가사근로자법’이 이토록 부실한 이유는,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이익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사근로자법은 시장 활성화와 기업 이익 보호에 위한 제도화 방안’을 이어받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11조)을 유지하고, 가사서비스를 파견금지업종으로 규정한 파견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꼼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력 중개업 등을 이용한 플랫폼 시장이 ‘불법 파견’ 논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오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1월, 민주당은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을 친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재계를 위한 “선물”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민주당에 전

▶ 3면으로 이어짐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김문성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 발전 등의 문제에서 우파와 코드를 맞춰왔고 인천시장 시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천한 송영길이가 뽑혔다.

그러나 부대표(“최고위원”)는 친문 인사들이 싸늘이했다. 친문이 비문에게 밀려 대표 자리를 놓친 것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레임덕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기 때문에 현 여권 핵심부가 곤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와중에, 5월 4일 열린 장관 청문회에서는 온갖 특권형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공급으로 가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리고 가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과기부 임혜숙), 해외 공판 근무 시절 필수 의혹(해수부 박준영), 관련 공무원 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받고는 관사에 살면서 이 아파트를 재산 불리기에 이용한 의혹(국토부 노형욱), 중부지역 고용노동청장 재직시 삼성의 무노조 대책을 묵인하고 이마트 사측의 선물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의혹(노동부 안경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제대로 안 낸 의혹(산자부 문승욱) 등등.

개인 비리 혐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문승욱과 안경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즉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더 문제적인 그들이 말이다.

“흠결만 따진다” 불만

김부겸에게 향해진 의혹은 더 심하다. 딸 가족이 가입한 라임자산운용의 한 펀드(테티스 11호)가 맞춤형 특혜 펀드라는 의혹이다.

김부겸의 딸 부부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으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하고, 김부겸은 딸 가족의 일이라서 자신은 문제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진실과는 멀어 보인다. 김부겸의 딸 부부는 장영준(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 라임 펀드 사기 건으로 구속돼 있음)에게서 비공개 펀드를 추천받았고, 여기에는 김부겸 딸 가족과 라임의 실세로 불린 이종필(라임자산운용 부대표)만 가입했다고 한다. 이 펀드는 성과보수 0퍼센트 등 특혜성이 짙다. 당시 김부겸은 (차기 대선을 노리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행전안전부 장관이었다.

또한 라임 펀드 부실 소문이 돌면서 환매 요구가 있었을 때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에 일절 응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딸 부부가 가입한 펀드는 환매가 일부 이뤄졌다고 한다.(본인들은 환매 못했다고 해명)

지난해 청와대-검찰의 갈등에도 라임 펀드 사기 의혹(펀드가 부실해지자 펀드끼리 돌려막기한 것으로 사실상 다단계 사기와 유사) 문제가 있었다. 다급해진 라임 펀드 측이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 ‘검찰 개혁’의 결과물인 공수처는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 1호 수사로 자신들의 기소 가능 대상도 아닌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선택했다. 문재인인의 위선적인 ‘검찰 개혁’의 실체가 현 여권의 권력형 비리 감추기임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애초부터 공수처는 전혀 개혁적인 기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노동자 연대〉신문의 비판이 옳았다.

여권은 몸을 사리면서도 각종 부패 의혹 덮기를 계속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쉽지 않다.

문재인인의 딸과 사위 부부가, 비리 범죄자로 구속된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의 도움으로 특혜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염두에 뒀던 이성윤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 출근 수사 방해 건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전임 추미애가 해체시킨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은 새 장관 임명이 쉽지 않자 짜증이 났는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애먼 청문회 제도를 뒀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을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됐다.”

국민의힘은 장관 3명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김부겸 임명 동의 등과 엮어서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하려 할 것이다. 이는 여권에 더한층의 우경화 요구가 될 것이다. 벌써 문재인은 이재용 사면에 ‘열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친기업 기조 강화 밝힌 취임 4주년 연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연설과 기자회견은 좌우 모두의 불만을 살 만했다. 진보 개혁 염원층에게는 다시 허탈감을 줬고, 우파에게는 공식정치의 협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연설에서 드러난 문재인인의 걱정거리는 노동자·서민의 살림살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지원” 단어가 13번 쓰였는데, 그중 10번이 기업 지원이었다. 반면, “고용”은 8번 나왔는데, 그중 절반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문장이었고, 나머지는 고용보험·고용안전망이었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생각은 없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은 8번 나왔는데 사실상 그저 현실 묘사로만 쓰였다. “복지,” “노동,” “가계,” “소득” 등은 한 번씩만 쓰였는데, 전부 자화자찬하는 문장에만 쓰였다.

“방역” 11번 중 7번, “백신” 13번 중 6번도 정부 정책 수행을 자화자찬하는 문장에서 사용됐다. 특히, 방역 당국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을 은근히 전가하는 발언은 압권이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무책임성과 반성 결여 때문에 그동안 친정부 성향의 보도를 해 온

〈미디어 오늘〉조차 대통령 연설 이후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더 낮아졌다는 사람이 그 반대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여론상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부진한 지지율과 지지분한 내분을 보고 신뢰를 가지기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가 계급 여야 정당들의 최근 행보는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조차 자본가들의 요구를 더 노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더 이동할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상호 균색한 처지는 이들 중 누가 반사이익을 얻더라도 대중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도 보여 준다.

노동계급 대변이 다소 아쉬운 정의당

한편,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개인 비리 의혹이 드러난 자들은 반대했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 안경덕은 찬성해 줬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기준이 “국민적 눈높이”(국민적 상식) 미명 아래 개인 비리(위법) 의혹에 주로 맞춰진 것을 반영한 듯하다.

자본가 계급 여야 정당들이야 안경덕의 친기업성에 동의하고 재계에서도 거부감이 없으니, 찬성에 애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덕의 친기업 성향, 정부의 노동존중 표방과 모순되는 인사임을

들어 반대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급속노조는 안경덕 임명에 반대했고, 마트산업노조도 안경덕을 비판했다.

실제로 안경덕은 취임하자마자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등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적극 화답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는데, 민간 일자리가 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다.

정의당이 김부겸 총리 임명에 찬성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법 문제보다는 계급 문제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한 특혜(그것도 펀드 사기와 연계된)를 누린 점을 애써 못

본 척하는 것은 정의 의원 대중의 처지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이런 행동들은 진보 의원 대중의 정치의식 발전에 해롭다. (정부에 불리한 최신 쟁점들에 대한 진보당의 침묵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효과를 낸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또한 자신들이 적극 찬성한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삼은 것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에 다소간 협조해 국가를 더 민주화한다는 것은 완전한 공상이고, 문재인인의 공수처는 위선의 절정이었다.

▶ 2면에서 이어짐

달한 재계 요구 입법 리스트 중 첫 항목이 가사서비스 중개업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가사서비스법’이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과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노동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NGO와 노동단체들이 가사근로자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 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시장적 본질을 가려주며 노동계급과 진보 의원 대중에게 혼란을 조장한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노동법을 피해갈 수 있는 선례를 남겨줄 수도 있다.

일부 NGO와 노동단체들이 가사근로자법 통과를 위해 기업과 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4월 29일, 이들은 가사서비스 기업인 ‘홈스토리생활’과

함께 ‘가사근로자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지난해 11월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부여받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홈스토리생활’ 같은 기업들은 ‘가사근로자법’의 정부 인증 제도를 디딤돌 삼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비스 차

별화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노동자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가사노동자법’을 폐기하고 정부 법안을 지지한 것은 유감이다. 자신의 법안(소정 근로시간이 기준, 주 15시간 의무조향 포함)보다 더 못한 정부안으로 후퇴한 것인데다, 정부안 지지로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돌봄과 가사를 공공서비스로 확충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노동계급과 서민층에게 계속 부담을 준다. 이것은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유지시킨다.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예외조항’을 삭제해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가사 서비스를 공공복지로 확충해야 한다.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양효영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빠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파 언론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상황을 호도했다. 청와대는 모욕죄 고소 취하를 거부하다가 참여연대와 청년정의당까지 비판에 나서자 결국 취하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국민 명예, 국격에 미치는 해악에 대응한 것”이라고 고소를 정당화했고, 앞으로도 “개별 사안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모욕죄 활용의 여지를 남겼다.

우파 청년의 문재인 비판 내용은 전혀 옹호할 가치가 없는 비방이자 흑색 선전이었다. 그 전단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 새빨간 정체를 폭로한다”는 문구가 실린 일본 극우파 정치 잡지를 복사한 것으로, 다른 면에는 박원순, 유시민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중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우파 청년은 지난해 중국이 남한을 식민지화하고 있고 문재인은 시진핑의 꼭두각시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인 단체(신 전대협)의 대변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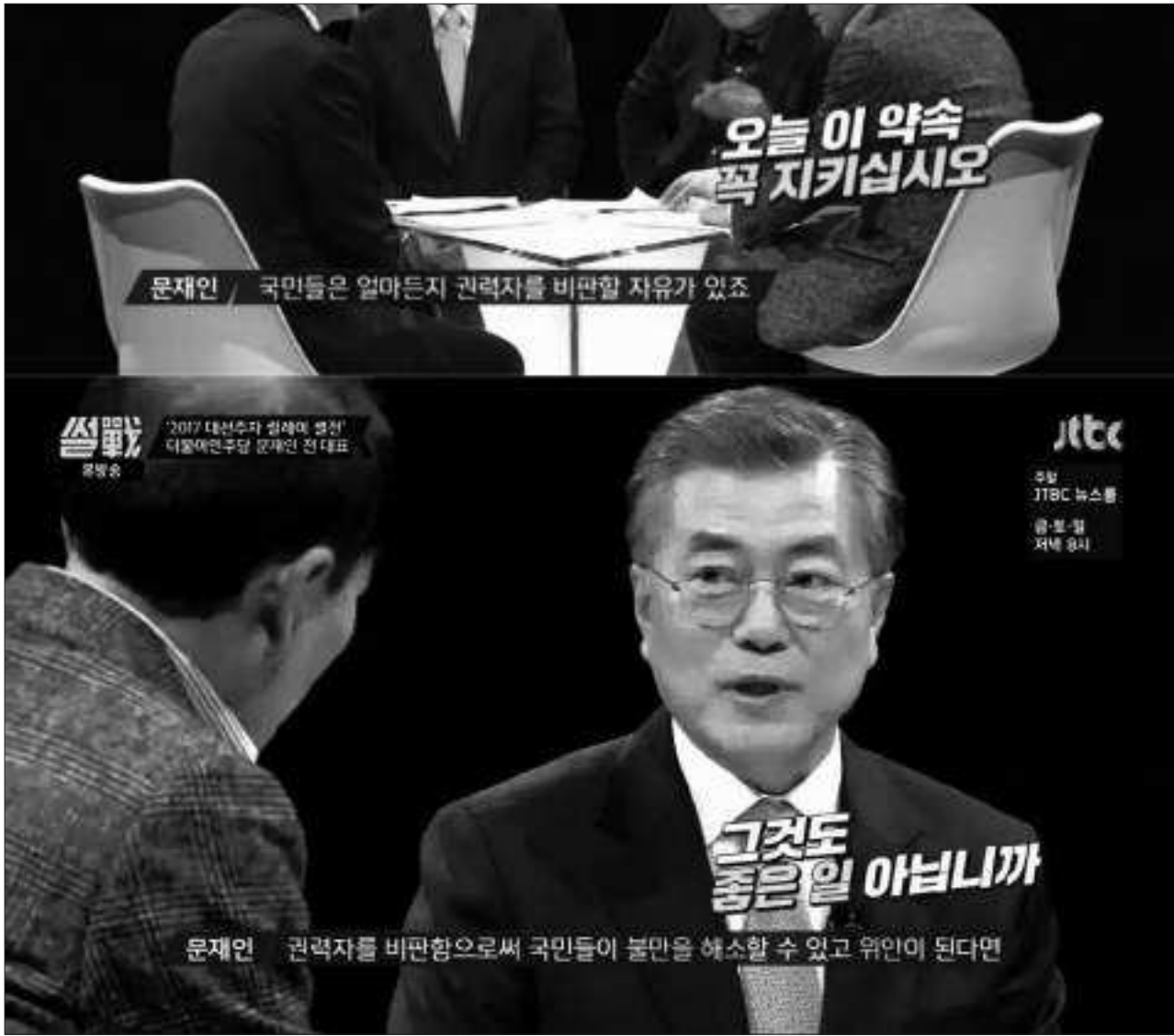
사실 사람들에게 별 호응도 못 일으킬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자신이 나서서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우파에게 명분만 준 정치적 오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가 “남북관계” 운운하며 모욕죄 고소 시도를 정당화한 것은 진보 진영에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어쭙잖은 변명일 뿐이었다. 수준 낮은 우파 지라시와, 문재인 정부가 지속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적 무기 배치 포함 역대 최대 규모 군비 증강, 이 중 무엇이 남북관계에 더 해악을 미쳤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7년 2월 문재인은 JTBC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비판을 관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국민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8월에도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에서는 집짓 관용적인 체하고는 뒤에서는 완전히 판판이었던 것이다.

모욕죄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모욕당했다는 감정에 기반해 처벌할 수



우파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건 마타도어지만 그게 먹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위선 때문이다. 2017년 2월 JTBC <썰전>

있는 법으로, 그 적용이 모호해서 권력자 비판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있었고, 강성친문 인사인 열린민주당 최강욱조차 모욕죄 폐지 법안도 발의했다. (비록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을 고려한 입장이었겠지만 말이다.)

한편, 청와대가 모욕죄 고소 이유로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함을 든 것은 좌파에게도 그 칼날이 겨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파의 위선

요즘 세계적으로 우파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우파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됐다.

최근 영국 보수당 정부 교육부 장관 개빈 윌리엄슨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학들에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하는 우파 학생들에게 말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위선적이게도 개빈 윌리엄슨은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시기에 내린 교육지침에서, 학생들에게 “극단주의적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좌파적 교사들을 압박했다.

우파들은 대통령의 이번 고소가 전례없는 일이라며 호들갑 떨지만 참말이 아니다. 2012년 20대 육군 대위가 이명박의 민영화 정책, BBK 의혹 등을 비판하며 트위터에 ‘가카새끼’라고 쓴 일, 2013년 30대 특전사 중사가 트위터에 ‘MB 쥐새끼’라고 쓴 일이 모두 “상관모욕죄”로 유죄 선고됐다. 2012년 당시 <조선일보>는 ‘장교가 군 통수권자에게 욕설하는 나라’라고 개

탄하며 20대 육군 대위를 비난했다.

2008년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도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가 직접 지시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지원금 배정과 공연 기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도록 한 사건이다. 그 명단이 무려 9473명에 이른다. 그 ‘죄목’들은 박근혜를 풍자한 것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까지 다양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을 유포한 일도 나중에 들들났다. 이명박의 경찰은 용산 참사, 쌍용차 점거파업 진압 건을 수호하려고 ‘사이버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 하나(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다)인 노동계급의 자주적 조직도 공격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가 범의노조 통보를 받았 다.

우파들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교란해 그 일부를 우파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

참여연대나 청년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잘 비판하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의 반영이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권력층

과 지배 질서에 대한 비판을 신체 안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기 위해 쟁취하려 해 온 권리였다. 위대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형식적으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지배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된다.

자본가들인 지배계급은 학교, 연구소, 언론, 예술, 출판, 교회 같은 이데올로기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지배한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미디어가 집중돼 있고, 그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사상은 거의 무제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반면, 차별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표현은 실질적으로 제약된다. 자본가 지배계급에게 표현의 자유는 이미 도래한 권리인 반면 돈 없고 힘 없는 노동자 개개인들은 기성 언론을 자기 의사대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추상적 권리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의 표현의 자유이고, 무엇을 말할 자유인지** 물어야 한다.

천대받는 대중에게 해로운 주장과 비방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감쌀 수는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우파 전단지도 남한 사회에서 가장 우파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을 재생산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란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의 자유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

우파의 위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 덕분이다.

이번 소동은 우파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정작 권력을 잡으면 그들도 권위주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일부이자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을 운영하는 권력자로서 대중의 표현을 다소간에 제약하는 것이 득이 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좌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 논란은 가장 최신 사례다. 평화적 토론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다. 2018년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고,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도 2019년과 2020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을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을 비판한 지식인의 표현 자유를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2019년 말 “민주당만 빼고 다”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쓴 임미리 교수를 고소하려다가 비난이 커져 철회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일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노동계급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데도 되도록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려 애쓴다.

최근 웹사이트에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일부 우회하는 법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인터넷 표현 단속에서 득을 보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우파의 막말을 빌미로 대북전단금지법이나 5.18 망언 규제법,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 이 법제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파적 주장을 막겠다며 무엇이 허용되는 표현인지 판단 여부를 국가에게 맡기는 것은 억압받는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수단들은 우파뿐 아니라 좌파의 주장들을 억제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노동계급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해서 그 세계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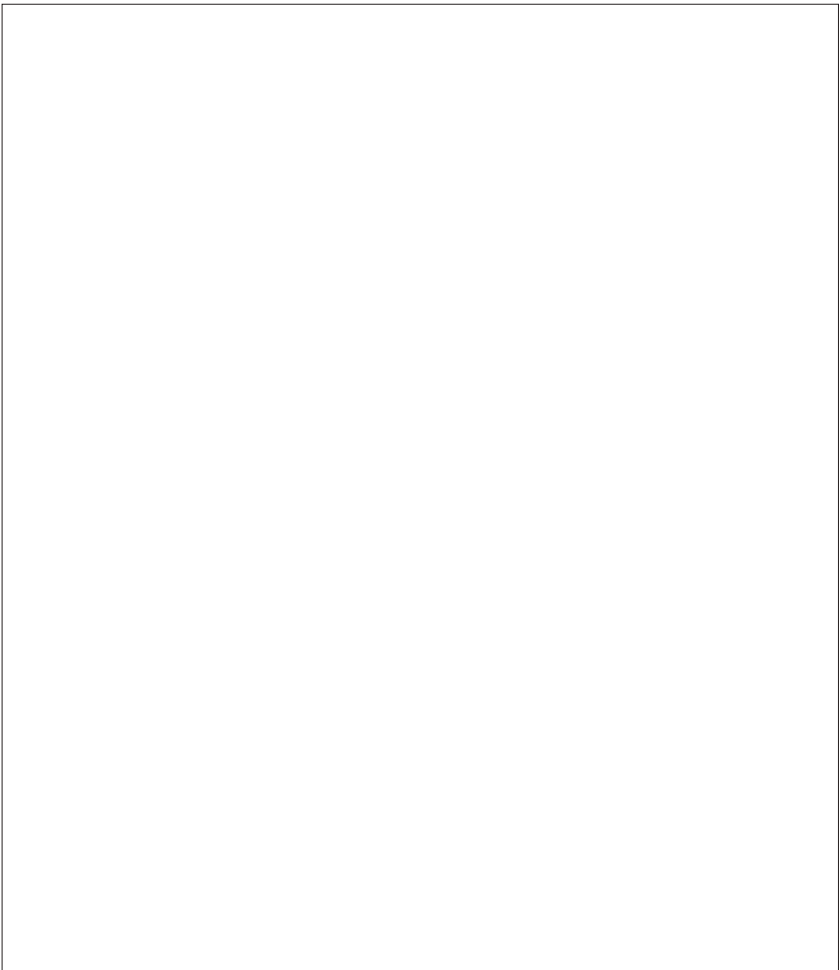
즉,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구의 핵심적 일부인 자유주의 정부가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반자본주의자들이 저항 속에서 쟁취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중적 투쟁 경험과 정치적 토론이 결합되면 대중은 체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 공격하는 인종차별 국가 이스라엘

닉 클라크

5월 1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건물 중에는 13층짜리 주거용 건물도 있었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마스 보 건당국에 따르면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고 한다. 많은 언론들은 ‘하마스의 포격과 이스라엘의 맞대응’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다루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 무장 경찰은 강제 퇴거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를 공격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이번 무력 충돌의 근원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가자 지구 공습 직전 상황을 다룬 기사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려는 시도에 맞서 분출한 저항은 이스라엘의 인종차별과 잔혹함을 들춰냈다. 이스라엘 경찰과 정착민들의 공격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 5월 10일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잔혹하게 공격했다. 경찰들은 모스크 단지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쏘아댔다. 모스크에서 밤을 지낸 노우르 브토우르는 <알자지라>에 이렇게 말했다. “저격수들이 모스크 단지의 문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고무탄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수의 경찰 병력이 난입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불길에 치솟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 공습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스라엘 경찰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경찰봉을 휘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고무탄을 마구 쏘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침공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진을 할 때 지나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7년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이후 이곳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그후 줄

곧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 동예루살렘의 인구 다수를 유대인이 차지하게 하려 해 왔다. 매년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 거주 구역을 행진하며 그곳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정착민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는 가운데 벌어졌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고 정착민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이용해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의 건물들을 탈취하려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들의 거주지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유대인 소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곳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침공해 점령한 지 3년 만인 1970년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아서 유대인이 다수 인종을 점하게 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은 흔히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넘어가거나 팔렸다.

특권

반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고향에서 쫓겨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빼앗긴 집으로 되돌아갈 권리를 부정당했다. 가족이 사는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77세 니벨 알쿠르드는 이번 퇴거 위협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정착민으로 채우려는” 인종차별적 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압텔파타 스카피는 이렇게 말했다. “최악의 인종차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아랍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시장 플뢰르 하산 나훔은 이 법이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고 유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임을 인정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유대

인을 우대한다고 여길 수 있는 법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유대인 국가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예정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경찰은 물대포와 섬광탄으로 응수했다. 이것은 라마단 기간에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갈수록 심해지는 더 광범한 탄압의 일부다. 5월 7일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는 시위 진압 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 약 200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격했다. 팔레스타인인 9만여 명이 경찰의 방해에도 알아크사 모스크에 모여 기도를 했다. 모스크를 방문하러 예루살렘 바깥에서 버스를 타고 온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그들을 버스에서 내쫓자 행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번 저항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는 법을 준용하는 판결을 연기해야 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한 인근 이라프 국가들의 지배자들은 이번 저항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배자들은 동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영웅적인 저항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더 멀리까지 확산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4호 / 번역 김지혜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더 우경화하는 노동당 지도부

세이디 로빈슨

보수당이 5월 6일 잉글랜드 지방 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특단의 조치로 대응했다. 안타깝게도 사임하지는 않았다. 대신 부대표 앤절라 레이너를 당 의장과 전국 선거운동 조직자 자리에서 내쫓았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당 좌파를 향한 공격의 전주곡이며, 노동당이 현재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당은 지방 의회에서 279석을 잃었고 여러 곳에서 ‘과반 정당’ 지위를 잃었다. 보수당은 지방의회 12곳을 장악했고, 의석도 235석을 더 얻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커티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당 강세 지역인 잉글랜드 북동부가 “완전히 (보수당 색인) 파란색으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기존에 노동당 지역구였던 하틀폴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7000표 차이로 승리했다. 티스벨

리에서는 보수당 벤 하우첸이 73퍼센트의 득표율로 시장으로 재선했다. 이 지역은 과거 노동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5월 6일 선거에서 노동당 지지표 23퍼센트가 보수당으로 넘어갔다. 잉글랜드 북동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우스요크셔주 로더럼은 수십 년 동안 견고한 노동당 지지 도시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보수당이 20석을 차지했다. 보수당은 이전에 이 지역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었다. 보수당이 얻은 의석 대부분은 14석을 잃은 영국독립당으로부터 온 것 같다. 그러나 노동당도 12석을 잃었다. 물론 노동당이 전멸하지는 않았다. 톨커스터, 솔퍼드, 노스타인사이드, 리버풀시티 지역에서 노동당 시장이 재선했다. 또, 많은 지방의회(리버풀, 세인트헬렌, 위건, 맨체스터, 로치데일, 울탐, 게이즈헤드, 뉴캐슬어폰타인, 선더랜드, 울버햄프턴, 샌드웰, 코번트리, 슬라우, 엑서터 등)에서 과반을 지켰다.

그러나 셰필드, 플리머스, 로센데일에서는 과반을 잃었다. 셰필드에서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다.

종합

보수당은 노동당이 장악했던 에섹스주 할로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던 팬들, 메이드스톤, 콘월, 노팅엄셔, 바즐던, 노섬벌랜드, 더들리, 넌이턴, 베드워스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보수당은 1974년에 생긴 미들랜드 캐녹체이스지구에서도 처음으로 과반을 얻었다. 여당이 지방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보수당은 정부가 팬데믹에 형편없이 대처하고, 총리 보리스 존슨이 부패 스캔들로 수렁에 빠졌는데도 승리했다. 스타머의 노동당에 대한 실망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또한 수십 년 동안 노동당이 주도한 지방의회가 긴축 정책을 막기는커녕 실행해 온

결과일 수도 있다. 보수당이 승리한 많은 곳이 유럽연합 탈퇴 지지가 우세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보면, 노동당이 [2016년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물었던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한] 2차 국민투표를 요구했던 후과를 여전히 치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코빈을 공격했던] 노동당 내 세력들이 자기 당을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수년간 공격해 왔으니, 일부 사람들이 당에 등 돌린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스타머는 노동당이 “노동자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좌파인 전(前)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의 지적은 옳았다. 스타머하의 노동당은 무기력하게 “정부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4호 / 번역 최병현 ※ 최종 개표 결과를 반영해 몇몇 수치를 수정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얀마 쿠데타 100일 무장 충돌로 더 기우는 민주주의 운동
- ★ 콜롬비아 부패한 정권에 맞서 대규모 파업·시위 분출하다
- ★ 5·16 쿠데타 60년 4월 혁명의 염원을 비들여버린 반동적 쿠데타
- ★ 1991년 5월 투쟁 30주년 5월 투쟁을 제대로 기억하기
- ★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
- ★ 스페인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 분출 10년 광장 점거 운동에서 포데모스의 좌초까지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정선영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했다. 또, 2조 2500억 달러(2531조 2500억 원)의 일자리 계획과 1조 8000억 달러(2025조 원)의 가족 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 합치면 약 6조 달러로, 미국 GDP의 30퍼센트에 이른다.

바이든이 재정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40년간 역대 미국 정부가 경제적 자유와 자유 시장을 옹호하며 신자유주의 정책들(자유무역 촉진, 민영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복지 지출 감축 등)을 추진할 때와는 다른 듯하다. 예컨대, 오바마 정부는 2008~2009년 금융 공황 때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채택한 이후 금세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재정 정책들은 대부분 8~10년에 나눠서 쓰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난 한 해만도 4조 달러를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이 그리 엄청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피폐해진 대중의 삶을 구제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충분한 돈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정책이 현재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심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인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없다면 경제는 더 큰 나라으로 떨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래프1).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같은 거대 IT 기업들과 대형 은행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전체 미국 기업의 이윤은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보면) 30퍼센트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대기업 200곳이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등 8개국 기업부채 총액 중 40퍼센트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불평등 확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것, 기후 위기 대처, 중국과의 경쟁도 국가 투자 증대의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마냥 눈감을 수 없다는 지배계급의 압박이 커질 것이



재정 확대 정책 발표한 바이든 이런 정책으로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공격이 강화될 것이다

다. 정부의 투자 확대는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지라도,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되는 이윤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조만간 재정 지출 삭감을 위해 복지를 줄이려는 지배계급의 공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재정 지출 확대에 소극적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독일을 보면, 향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그래프2)

한때 신자유주의의 선봉이던 IMF조차 6년 전부터 신자유주의를 비판해 온 것도 신자유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사례로 언급된다. 더 최근에 IMF는 재정을 풀 수 있는 국가들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를 달았다. “여력이 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IMF는 아르헨티나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외환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게는 여전히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여전한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

특히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끝났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가 강화됐지만 매우 최근에 그 위세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고, 지난해에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연상시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집권 후 얼마 되지 않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폐기된 데서 보듯 소득주도성장은 말뿐이었다. 오히려 대표적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에 자리를 내주었다. 2018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동반한 공산이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단기·저질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더 강조된 것은 ‘디지털 뉴딜’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도 재생에너지 육성을 민영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이전 정부들의 민영화 정책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SR(수서발 KTX)과 코레일 통합을 공약했지만, 철도 경쟁 체제를 위해 공약을 폐기했다. 국유화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며 민영화했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쌍용차 등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난해 재정 지출을 늘리긴 했다. 하지만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다(그

래프3). 지난해 말에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통과시켰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내외에서 일정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노동자 연대> 172호),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지배계급에 득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 이후를 전망하려면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양상과 그에 대처해 온 지배자들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

신자유주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됐다. 1930년대 대불황 전까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준다는 교리가 주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 축적(특히 인수·합병을 통한)으로 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형성된 거대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밀접하게 결합되는 경향이 전개된 것이다. 20세기 초의 마르크스주의자 힐퍼딩·부하린·레닌 등은 이런 상황을 독점자본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렀다.(레닌은 또한 때로 ‘국가적 독점자본주의’나 ‘국가독점적 자본주의’라고도 불렀다. G. 하르다하, 《사회주의 경제이론》, 정명기 옮김, 한마당, 1990)

그러나 1930년대 대불황이 닥쳤을 때 각국 정부가 자유주의적으로 대처하자 불황은 더욱 악화했고, 기업 파

산과 실업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자유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930년대 대불황에서 빠르게 회복한 나라 하나는 독일인데,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재편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 경제도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소련도 국가가 주도해 자본 축적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일본도 전면적 국가자본주의의 사례인데, 지면 제약으로 설명은 생략하겠다.

미국에서는 1933년부터 루즈벨트 정부가 뉴딜 정책을 쓰며 경기 부양책을 썼다(월런 털 전면적인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 이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듯했지만, 1937년에는 다시 (더 심각한) 경제 침체로 빠져들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케인스주의는 실제로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과 1950~1960년대 대규모 군비 지출을 통해서야 가능했다.(관련 기사: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노동자 연대> 320호)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50~1960년대까지 30년간 호황이 지속되자, 국가 개입이 위기를 피하게 해 준다는 생각이 유행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날에도 국가가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에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0~1960년대에는, 적자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케인스주의가 실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국 각국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애썼다.

제2차세계대전으로 자본이 대규모로 파괴돼 이윤율이 회복되고, 특히 군



긴축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커져 왔다. 2016년 영국의 반긴축 시위

비 지출 증대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가 군비 부문으로 누출되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이 상쇄됐기 때문에 장기 호황이 가능했던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상시적 군사 경제’, 최일봉, 《마르크스 21》 32호를 보라)

물론 당시 정부들은 경제에 깊이 개입했는데,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임금 수준을 올리려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데 힘썼다. 이 시기에 서구에서 의료, 교육, 보육, 공공주택, 연금 등의 복지가 확충된 것도 호황이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데다, 숙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본가 계급의 필요도 반영된 것이었다. 복지 확충은 당시의 노동력 부족 시대에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여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복지 비용의 대부분은 자본가 계급의 이윤에서 나오기보다는 노동계급의 고임금층에서 저임금층으로 흘러간 것이었다.

장기 호황기에 정부는 공공 기반시설도 크게 확대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장기 호황기에 국가 개입이 진보적이었다는 오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국가 개입은 호황 상황에 맞춰 자본 축적과 이윤 증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군비 지출 확대로도 이윤율 하락은 결국 피할 수 없었고 1970년대 초부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됐다. 그런 데 장기 호황기에 기업의 규모는 더욱 커져서 이제 일국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진화했고, 이런 변화는 개별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

다.

1970년대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각국 정부들은 케인스주의 정책을 실제로 사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케인스주의 정책들은 (경제는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만 일으켰다.

그러자 1976년경부터 지배계급의 대다수는 국가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기 시작했다. 국가 간섭은 특히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아 이윤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들이 힘을 얻으며 지배계급 다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복귀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요구했다. 시장 개방, 복지 삭감, 비효율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규제 완화,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을 추구했다. 이런 신자유주의 파동에는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과 노동 착취 강화가 동반됐다. 덕분에 1980~1990년대 이윤율이 부분적으로 상승했다. 게다가 1989~1991년 옛 소련 등 동구권이 몰락하며 시장경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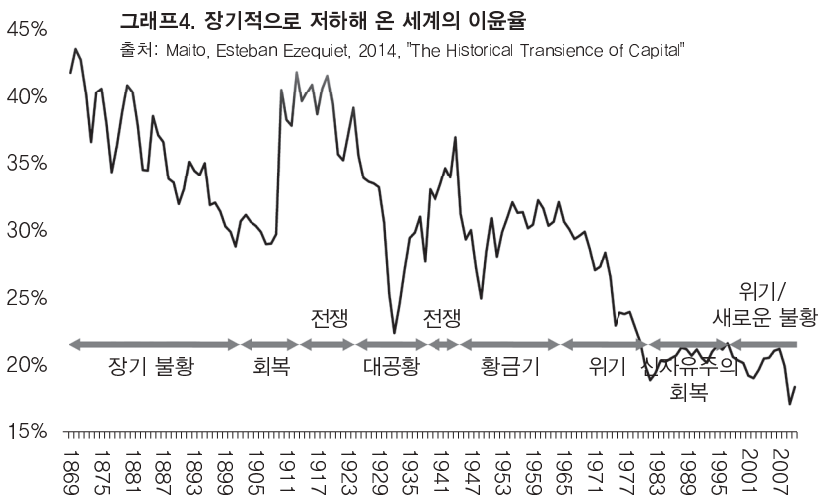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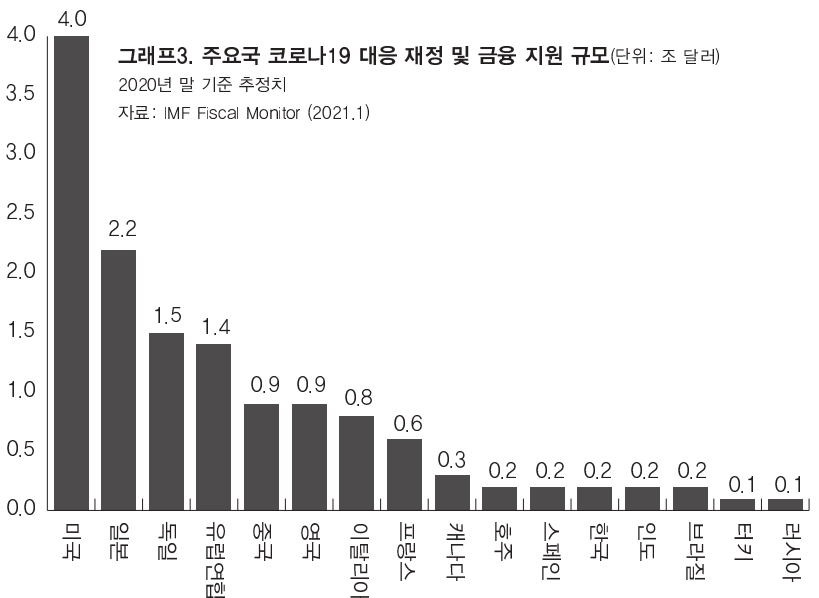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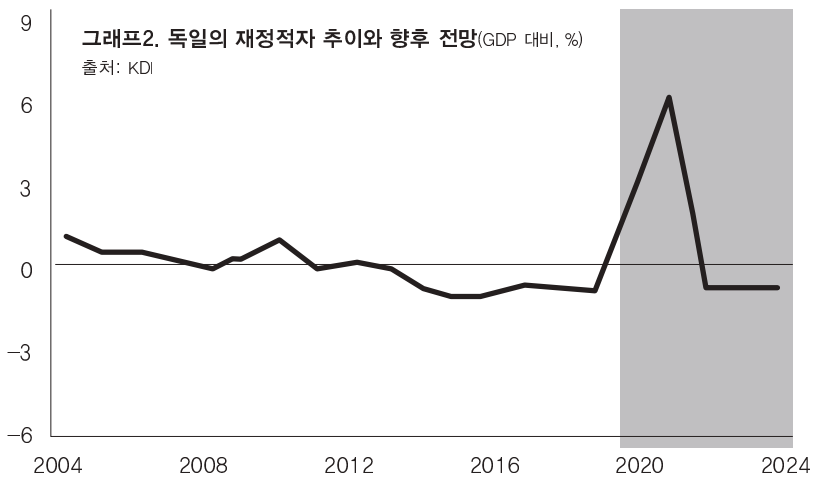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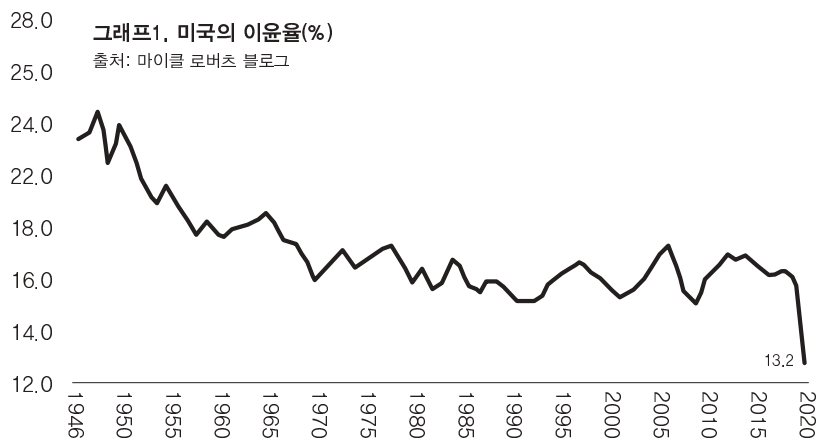
그러나 신자유주의 덕분에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경제에 개입해야 했다.(대마불사)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표방한 이데올로기와 달리 실제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시기에도 경

제 위기가 닥치면 국가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다. 특히, 2008~2009년 공황과 팬데믹이 닥친 지난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을 살리자 신자유주의의 모순은 두드러졌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 내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경제도 살리지 못한 채 착취만 강화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일부 지배자들은 이런 불만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저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불황기에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가령 트럼프 등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해 보호무역 정책들과, 이주민을 속죄양 삼는 선동을 강화해 왔고 신자유주의 정책 중 자유무역은 다소 공격했지만, 법인세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더 공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위기에 대처해 케인스주의가 대안이 되지 못했듯이, 바이든의 정책도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윤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본의 대량 파괴(대규모 산업구조조정과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통한)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 위기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복지 등을 공격해야 한다는 자본가 계급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급에게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임금, 복지 확대 등을 하라고 요구하고, 부도 기업은 국유화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하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늘어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자본주의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하락이라는 체제적·구조적 문제로 지속적 침체를 겪고 있다.(그래프4) 국가 개입을 강화한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이윤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윤 체제를 유지하는 한 결국 노동자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롭기가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정한 대안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강화를 통해 국가와 자본을 공격하는 것이어야 하지, 국가를 이용해 사회 체제와 구조를 재편하려 헛되이 애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양효영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IT 대기업이다. 온라인 서비스·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급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5100만 달러(17조 444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8퍼센트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은 수익)를 기록했다. 페이스북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13억 8800만 달러(약 12조 6179억 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04퍼센트 증가했다.

극소수의 거대 IT 기업들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 IT 분야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집중과 집중이 상당히 진행돼 왔음을 보여 준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이라는 환상이 꽤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에서 대자본의 힘은 막대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려 한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인 쇼샤나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문학사상)에서 이런 거대 IT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상세하게 폭로한다.

구글 — 표적 광고로 거대 IT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구글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닷컴 호황 붐괴로 회사 문을 닫을 상황에 놓인 여러 벤처 기업 중 하나였다.

초창기 구글은 검색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검색어, 클릭 여부 등)로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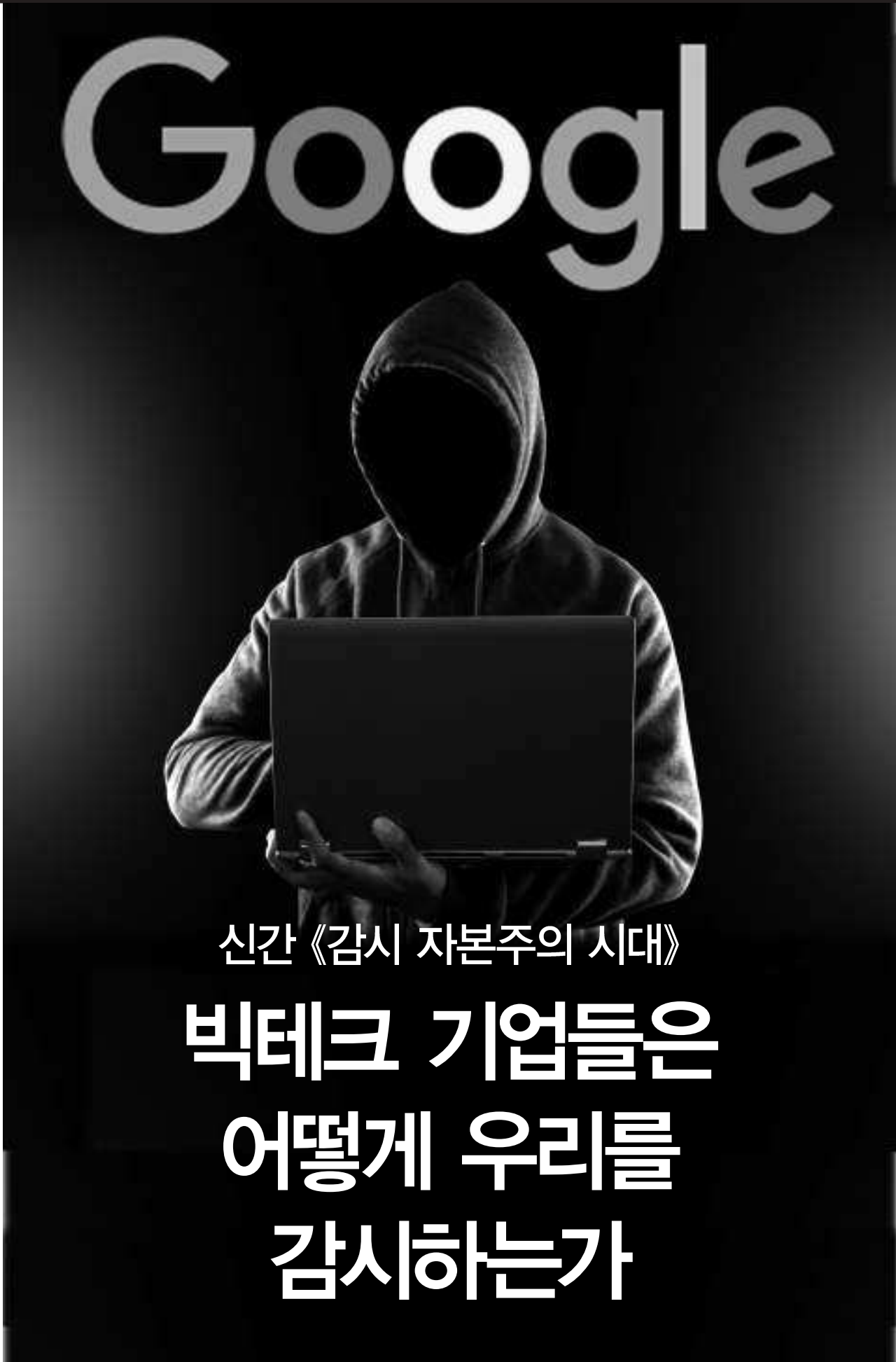
곧, 구글 창립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정 광고를 특정한 유형의 개인에게만 노출시키는 ‘표적 광고’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예컨대, 전립선암 검사 광고는 45세 이상 남성에만 노출시키는 식이다.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구글은 사용자들의 미래 행동도 일부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예측은 구글이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이 됐다.

구글 광고는 검색과 연결돼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 받게 됐다. “영어 공부”를 검색했더니 영어 학습지 광고가 뜬다든지, 온라인 쇼핑물에서 찾아본 물건이 온라인 뉴스 기사 옆에 광고로 뜨는 경험을 누구나 해 봤을 것이다.

표적 광고는 구글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줬다.

광고 수익은 여전히 구글 이익의 핵심 쥔줄이다. 2016년 알파벳이 거둔 수익의 89퍼센트는 구글의 표적 광고에서 나왔다. 코로나19 동안 거대 IT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증대한 이유 하나도 광고 단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도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지하는 비중이 97퍼센트에 이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의 베이징 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광고 클릭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은 검색 비즈니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제품에서 정확도를 0.1퍼센트만 개선해도 수입이 수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개인정보 = 이윤 기회

그래서 더 많은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구글에게 사활적이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가족 관계뿐 아니라 생활 패턴, 심리, 인간 관계 등도 모두 수익 창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신기술 ‘스타트업’(신생 중소벤처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구글은 유튜브, 페이스북은 왓츠앱 등을 인수·합병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했다. 인수·합병으로 얻게 된 이용자와 막대한 데이터를 다시 광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사용자에게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됐다.

예컨대, “추적 쿠키”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쿠키는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서버가 사용자의 기기에 기록하는 정보인데, 이를 통해 사용자의 특성이나 인터넷 사용 패턴을 수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같은 업체들이 ‘제3자 쿠키’를 심고, 이는 사용자 식별에 이용된다. 어떤 온라인 쇼핑물을 한 번 방문했더니, 방문하는 웹사이트마다 그 쇼핑물 광고가 뜨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100개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방문하기만 해도 컴퓨터에 6000개 이상의 쿠키가 남는다. 이 중 83퍼센트는 방문한 웹사이트와 무관한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구글은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3자’다. 2015년에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티모시 리버트는 상위 100만 개 웹사이트 중 90퍼센트가 약 9개 외부 도메인(인터넷 상의 서버 주소)으로 데이터를 유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웹사이트들의 78퍼센트는 구글 소유 도메인으로, 34퍼센트는 페이스북 소유 도메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구글은 2021년부터 제3자 쿠키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자사의 크롬 브라우저에 이를 대체할 다른 메커니즘(FLoC)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 구글이 지메일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막대하다.

또 다른 사례는 지도에서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 주는 ‘스트리트 뷰’ 프로젝트다. 2010년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는 거리를 촬영하는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이 사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몰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처음에 구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구글이 가로채 저장한 데이터에는 “이름, 전화번호, 신용정보, 비밀번호, 메시지, 이메일, 대화 내용뿐 아니라 온라인 데이트 기록, 포르노그래피, 검색, 의료 정보, 위치 데이터, 사진, 동영상 및 음성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현실 세계로도 침투하는 감시

구글의 “스파이-파이”(스파이 와이 파이) 스캔들은 감시 자본주의가 현실 세계로 침투한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홈 기기 시장도 그런 사례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36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로 추산



감시 자본주의 시대
권력의 새로운 개척지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

쇼샤나 주보프, 김보영 옮김, 문학사상,
888쪽, 32,000원

된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를 공격적으로 홍보·판매하고 있다. 알렉사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녹음하며 막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한다. 로봇 진공 청소기 룬바의 제조사는 룬바를 통해 얻어 낸 집 안의 평면도를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도 이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삼성은 스마트 TV를 비롯해 스마트 냉장고·청소기·전등 등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가전 기기를 판매하는데, “TV 근처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를 녹음해 또 다른 시장 선도 기업인 뉘앙스커뮤니케이션즈의 음성 인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애플도 아이폰 사용자가 AI 음성비서 ‘시리’와 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녹음해 왔다는 사실이 2019년에 드러나기도 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두가 전 세계에서 테라바이트 규모의 발화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하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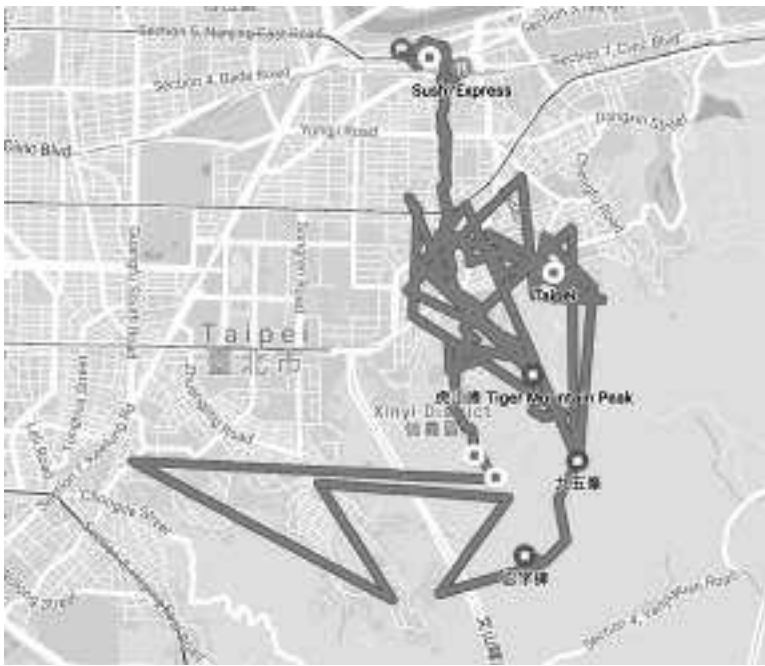
포켓몬고의 경제학

주보프는 오늘날 거대 IT 기업들이 행동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만들어 내려 한다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사례는 몇 년 전 크게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게임이다. 이 게임은 참가자들이 실제 세계를 배경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화면을 통해 가상 몬스터를 잡고 훈련시키고 싸우게 한다.

포켓몬고는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포켓몬고 제작사인 ‘나이앤틱랩스’의 창립자 존 행키는 구글 스트리트 뷰 총책임자였고, 개발 팀원 대부분도 구글지도 팀 출신이었다.

이 구글지도에 “행동의 경제학”이 도입된다. “포켓몬고는 … 행동을 조작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한다.”

사업주들은 “루어 모듈”이라는 것을 구매해서 가상 몬스터들이 그들의 가게에 모여들게 해 방문객을 늘릴 수 있다. 일본 맥도날드는 신속히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 1만 2000곳은 공식 “포켓스탑”(포켓몬 트레이너들의 휴게소)이 됐고, 트레이너를 위한 “포켓몬고 프라푸치노”를 출시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는 매장 1만 500곳과 서비스센터를 “포켓몬고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는 약관들을 근거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왼쪽 그림: 구글 지도 서비스에 표시된 사용자의 이동 경로)

국가 권력과 유착해 성장한 감시 자본주의

이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현재 위치, 관심사, 생체 정보, 감정까지 손에 쥐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은 극소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권위주의보다는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들 내부는 극도로 비민주적이고 비밀주의적이며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다.

IT 대기업들은 국가 규제나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에도 저항해 왔다.

구글의 조세회피는 악명 높다. 4월 14일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2020년 한국에서 매출이 2201억 원이었다고 공시했다. 구글은 국내 앱 내 결제로만 5조~6조 원 매출을 내는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매출을 축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단지 이런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드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국가는 거대 IT 기업을 키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구글은 유착을 강화해 왔다. 구글은 국가 안보 기관들의 정보 수집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

2003년, 구글은 안보 당국에 검색 기술을 제공하는 207만 달러(약 2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구글은 CIA 산하 기구를 위한 검색 엔진을 개발하기도 했다.

인적 유착도 강화됐다. 군과 정보기관 당국자, 첨단기술 업계, 기업 최고 임원, 방산업체 등이 교류하는 ‘펜타곤 하이랜드 포럼’은 “구글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자 인큐베이터”였다.



“2016년 4월까지 197명이 정부에서 구글권(구글과 구글의 계열사, 로펌, 로비 회사들)으로, 61명이 구글권에서 정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백악관 공무원이었던 22명이 구글로 이직했고, 구글권의 간부급 31명이 구글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백악관 혹은 연방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오바마와 트럼프 임기 동안 구글은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이었다. 2014년 구글이 로비에 쏟은 돈은 1700만 달러(약 189억 원)를 상회했으며, 2018년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구글은 1800만 달러(약 201억 원) 이상의 로비자금으로 다른 모든 기업을 압도했다.

시민단체·학계의 ‘구글화’

구글은 학술 연구와 시민 사회 영역에 침투해 비판이나 조사를 악화시키고 때로는 좌절시키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법경제센터는 구글로부터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들은 2012년 학술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시도를 격렬히 비판했다.

구글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성소수자 단체들에 기부하는 후원금도 이런 이미지 세탁의 일환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극우 시민단체들에도 지원금을 줬다는 것이다. 미디어민주주의센터의 심층조사 보고서 “극우의 구글화”를 보면, 2012년 구글이 기부금을 낸 기관들 중에는 조세에 반대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구글은 기업 로비 단체인 ALEC의 회원이었는데, 이 단체는 총기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반대하고, 투표 억제 정책, 담배산업 감세 등을 옹호해 왔다.

2017년 뉴아메리카재단의 디지털 독점 전문가 배리 린은 유럽연합이 구글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한 것을 지지하는 논평을 재단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 구글은 재단에 압력을 넣어 배리 린과 그의 연구진 10명을 해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보프는 구글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들의 실패를 훌륭하게 폭로한다. 주보프가 모은 엄청난 양의 증거는 경이롭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정치적 문제들도 있다. 주보프가 파헤친 과정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감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도래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은 거대 IT 기업들의 행태가 자본주의적 논리의 귀결임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주보프는 책의 마지막 3분의 1을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를 대비하는 데에 할애한다. 주보프는 거대 IT 기업들을 마치 선량한 자본주의를 잠식하는 외부 침략자처럼 묘사한다.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가 “시장 민주주의를 무섭게 위협한다”면서, 시장자본주의가 “까마득한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지와 빈곤과 고통에서 많은 인류를 구해 냈다” 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시장은 자본가들의 불평등한 싸움터일 뿐이다. 그 싸움에 뛰어들 자본주의 기업은 내부적으로 결코 민주적이었던 적이 없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지도 않았다.

주보프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동 조작을 감시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애쓴다.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가 인간과 인간 행동을 시장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도구적 관점은 현대 자본주의만의 특징이 아니다. 생산을 뒷받침하는 온갖 사회적 활동들은 어느 자본주의의 국면에서든 수량화되고 시장 교환을 통해 비교돼 왔다. 인간은 생산 단위와 소비 단위로 취급되고, 인간의 필요, 욕구, 능력은 이윤 추구라는 무자비한 시장 명령에 종속됐다.

감시 자본주의가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가 “행동 일

여” 추출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이런 개념은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의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흐린다. 주보프는 요즘 유행하는 “프로슈머” 이론에는 회의적인 것 같지만 그의 관점이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치 않다. 프로슈머 이론은 거대 IT 기업들의 부가 노동자 착취에서 오지 않고, 사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게 마술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착취해서 상품을 만든다. 구글의 경우 그 상품은 주로 광고 자리일 것이다. 이런 상품은 주로 다른 자본가에게 판매된다. 구글은 노동과 기술의 구성이 비슷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다. 이는 구글이 서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경쟁자를 계속 물리쳐야 한다. 경쟁사들도 나름대로 개인 데이터를 잔뜩 축적하고 막대한 하드웨어 설비와 노동력을 거느리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의 결과다. 구글은 가치법칙을 왜곡할 만큼 거대하지만, 가치법칙을 아예 벗어나지는 못한다. 오래전에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시장 경쟁은 그것의 정반대로 보이는 독점을 낳지만 독점은 결코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철옹성 같았던 과거의 독점들도 결국 영원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구글이 활동을 지속하려면

노동자들이 기꺼이 노동을 해줘야 한다. 여기에서도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구글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추행, 성별 임금 격차, 성추행 사건 강제 중재에 항의해 파업에 나섰다. 몇몇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광범하고 규제받지 않는 자동화가 낳을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한 활동과 연결시키려 했다.

이런 저항은 거대 IT 기업의 또 다른 잠재적 아킬레스건이다. IT 노동력은 규모가 커지고 정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IT 노동자들 규모는 크게 늘어왔고 노동조합으로도 조직되고 있다.

인터넷 이전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결국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 사이의 경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맹목적 이윤 추구하고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한 인터넷은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인류는 중요한 과학적·문화적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의사소통을 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숨길 것과 드러낼 것을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방해한다. 감시 자본주의는 증상일 뿐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질병에 있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47호에 실린 조셉 추나라의 서평 “The logic of capital online”을 많이 참고해서 쓴 것이다.



거대 IT 기업들도 이윤을 내려면 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야 한다. 2018년 11월 구글 노동자들의 파업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설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주로 임시·일용직이 타격을 입었고, 청년과 여성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 통계만 봐도 공식 실업자가 115만 명,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쉬거나 단념한 사

람이 200만 명, 청년들이 체감하는 확장실업률이 25.1퍼센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일자리 보장제도 그런 취지를 내세운다. “(민간) 기업을 통한 고용”은 한계가 크므로,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로서 실업의 완전 해소를 책임져야 한다.” 간접적 취업 지원에 그친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달리, 정부가 완전고용을 목표로 직접고용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보다 정의》 창간준비호)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대상 범위 면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시하는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가? 그것은 진정 실업난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가?



정의당은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내년 대선 제1공약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보장제의 이론적 근거

정의당은 아직 큰 틀의 방향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의당 산하 정의정책연구소가 현대화페론자들의 ‘일자리 보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게 논의의 출발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일자리 보장제 도입 요구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인 버니 샌더스(모두를 위한 일자리) 공약)와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이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그에 앞서, 2000년대 이후 현대화페론자들이 이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현대화페론은 ‘주권 국가의 화폐 발행 능력이 무한하다’고 보면서 정부가 지출을 무제한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고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결함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321호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한 세계적 불황’을 보시오.) 현대화페론자들은 이런 이론적 전제를 근거로 일자리 보장제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일자리 보장제에서 정부는 일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들 모두를 “정해진 생활임금”으로 고용한다. 정부는 돌봄, 생태, 보건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자본 시장(혹은 민간 기업들)을 통제하거나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보장제 하에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민간 부문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맡아 주는 “최후의 고용주” 구실을 한다. 주요 현대화페론자인 랜들 레이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재고(在庫) 정책”을 펴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주요 현대화페론자인 빌 미첼은 “일자리 보장 정책은 시장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같은 전제가 뜻하는 바는 일자리 보장제가 실업자들을 대거 공공 일자리로 흡수하되, 민간 자본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탱하고 보조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빌 미첼은 이렇게 말한다. “민간 부문의 임금 구조에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려면, 일자리 보장 정책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것이 최적이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임금 구조나(고용 조건·여부를 결정하는) 자본의 힘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자는 것이다. 즉, 영국의 마르크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꼬집었듯이, “정부가 자본주의에게 제공하는 안전장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가 모두의 일자리를 책임지게 하자’는 매력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보장제는 그 취지에 걸맞은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

첫째, 일자리 보장제는 민간 부문에서 생겨나는 실직의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인 공공 일자리로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데 있다.

또, 민간 부문의 임금·고용 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거기와 경쟁하지 않기 위해, 일자리 보장제로 새롭게 생겨날 공공 일자리의 질을 낮은 수준으로 제약한다.

어떤 일자리인가?

어떤 사람들은 민간 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가 관할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사회보험 같은 사후 보완책을 펴는 것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상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고용 위기에 대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게 아니다. 지금도 각국 정부는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주들을 구하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다. 이런 자원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데 사용하라고 노동운동은 요구하며 투쟁할 수 있다.

가령 부도·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 기업을 국유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노동조건 악화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자리를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이런 요구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보장제가 제기하는 국가 책임은 시장을 우회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조차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자리 보장제가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임금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고정된다. 시장을 통제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 임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을 “밑바닥에서 고용”(빌 미첼)해야 한다.

그러면, 마트업이나 중소 하청업체

같은 기업들은 일자리 보장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 일자리 보장제 하에서는 더 낮은 임금(최저임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마이클 로버츠는 일자리 보장제가 2000년대 초 독일에서 도입된 ‘하르츠 개혁’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하르츠 개혁’은 그럭저럭 실업률을 떨어뜨렸지만, 실업자들에게 매우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하르츠 개혁’의 진실’을 보시오.)

최저임금

일자리 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그 정의상 정규직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보장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유희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박가분, <뉴스톱> 2020.8.7). 즉, 공공부문에서 상시·영구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실업자들을 잠시 맡아 저임금의 노동력 풀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으므로(지난해 기준 미달률은 15.6퍼센트) 일자리 보장제가 의미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 정책을 통해 “민간 노동시장에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보장제로 만들어질

공공 일자리가 민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고착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할까? 국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에 따르면, 현대화페론자인 처네바가 추정한 일자리 보장제의 소요 예산은 GDP의 1~1.5퍼센트이고, 이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100만 명 내외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정부 지출은 아닌 셈이다. 문제인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단시간 공공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나은 수준은 못 되는 것이다.

한편, 변혁당은 버니 샌더스 등의 일자리 보장제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되, 그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좌파적 버전의 ‘국가 책임 일자리’를 제안한다. 여기에는 노동시간 단축, 생태적 산업 재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또한 최근 들어 부쩍 이 단체가 분명히 하고 있는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노선, 즉 기간산업, 에너지·통신 산업 등 주요 경제부문의 국유화를 ‘사회주의’라고 칭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현 시기에 필요한 진정한 사회주의적 전술들은 개혁주의 정당들과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의 주도권을 일반 노동자 대중이 넘어설 수 있도록 후자의 투쟁성과 급진성을 조직으로 표현하는 것에 목표를 뒀야 한다. 이에 견주면 대선이라는 선거 참여는 선전에 불과한 부차적인 활동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진정한 대안

앞서 살펴봤듯이, 원래의 일자리 보장제는 경제 불황에서 일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제안이 내세운 포부와 달리 정의당 정치인들이 소심한 수준으로 미끄러진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도전하지 않고 그것을 우회하거나 보조하는 길을 택한 데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인 노동자들이 요구를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건한 개혁주의 정당·노조 지도자들이 경제 상황을 이유로 타협해 불필요하게 후퇴해 온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와 사용자들,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껏해야 저질 일자리를 만들어 생색이나 내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과 자본간 경쟁 논리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어렵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볼 때, 실업 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대안은 없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부도·파산 기업의 국유화**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그 필요가 더 분명히 드러났듯이, 보건·돌봄·요양 등 공공·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임금·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대중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대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하라” 2018년 3월 파업했던 백화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폭 확충돼야 하는 이유이다.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리고 끔찍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출돼 온 요구이다. 비록 꽤 오래전부터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시에 임금·조건 후퇴를 받아 들여 인력 충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 점에서, 노동시간은 일시에(법정 노동시간 규제로) 대폭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임금·조건 후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줄어든 임금 때문에 연장 근무나 투잡, 쓰리잡에 내몰리거나, 노동강도 강화나 외주화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부도·파산 기업의 국유화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다. 고용주가 더는 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부도 기업에

서, 국가만이 일자리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대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 존재다.) 이 점을 이용해 정부에게 일자리 보장의 책임을 지우며 정치적 투쟁을 건설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투쟁이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들은 부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만간 그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그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다(가령 법정관리 하의 쌍용차, 대우조선 등). 그런 경우 그 기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경영의 목표가 된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깎고 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매각을 위한 임시관리체제가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구적으로 기업을 소유·운영하는 영구적 국유화가 필요하다.

동력이자 수단

이 같은 대책들은 고용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다. 국가에게 일자리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종립적 기구로 보고 노동계급에 이로운 기구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대중적 저항에 떠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 없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부도·파산 기업을 국유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인 정부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망을 배신한 것이나, 그 와중에도 보건의료·필수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한 만큼 늘리지 않는 것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노동자들의 만만찮은 저항이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요구들은 그 자체로 사회

주의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용 안정이라는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위한 당면 요구로, 자본주의 하에서도 투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재적 논리라는 면에서 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걸고 투쟁하면, 정부와 기업주들과 그 언론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어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나라 경제를 파탄내려 하느냐면서 말이다.

따라서 그런 투쟁은 기존 정치·경제 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럴 때 충돌을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윤과 자본간 경쟁의 논리에 도전해 국가를 압박하면서 광범하고 단호하게 투쟁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가 불황일 때도 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서, 더 나은 일자리와 임금을 요구하면서 싸울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그렇게 투쟁해서 조건을 지킬 수 있었다.

가령 1930년대 대불황 속에서도 미국 플린트의 GM 노동자들은 전국적 공장 점거파업 물결을 이뤄,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을 좌절시키고 승리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노동자들도 대규모 파업과 공장 점거로 임금 인상, 유급 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 등을 따냈다.

이런 대중 투쟁으로만 지배계급에 양보를 강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업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의 전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박해신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팽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팽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핀은 뽑혀 있었다.

고인은 대학교 복학 전 주식회사 동방의 용역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동방은 자회사 일조국제웨리를 두고 FRC를 관리했다. 3월부터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나눠어져 있는 업무를 통폐합시켜 노동자들이 하지도 않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 고 이선호 씨가 사망 당시 한 업무도 당일 처음 투입된 일이었다.

그런데 원청인 동방은 자신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며 한사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이 한 일은 동방이 통폐합한 여러 업무 중 하나였다. 게다가 원·하청이 형식적으로 구분돼 있다 할지라도 현장 업무가 원청의 지시 없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사측은 참사 이후에도 철저히 이윤 우선적이었다. 고인의 아버지가 분노

하며 말했듯 현장 책임자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선호 씨가 숨져가는 모습을 뒷선에 보고했다.

참사의 원인과 원인을 감추려는 시도 한 가운데 이윤 우선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주들은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싼 값에 가능한 많이 부리고, 하청 구조를 통해 책임 회피를 하려 한다.

유가족들은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함께 원청인 동방의 책임 인정·사고·재발방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팽택항 내 응급치료시설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팽택항하역고(사)이선호군 산재사고 유가족 장사

이윤 우선 논리에 희생된 고 이선호 씨. 영정 사진 속 모습이 아직 애타다

정부도 책임 있다

5월 11일, 문재인은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책위에 해당 사업장이 민간부두여서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 항만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을 한참 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실한 항만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 인력 부족 탓에 여태껏 건설·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을 주되게 관리해 와서 항만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 기관 내에서 여기저기 책임 돌리기에 바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산재 사망 사고 절반 감축' 공약은 역시나 빈 수레였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3.2퍼센트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1월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00명이 훌쩍 넘는다. 고 이선호 씨가 사망한 직후 포스코 광양 제

철, 현대 제철에서도 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참사의 배경을 유지·강화해 왔다. 고 이선호 씨의 사망 원인으로도 꼽히는 외주화, 하청 비정규직 문제, 인력 부족 사태 등은 정부의 정책 하에서 용인돼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는(선거 때 치고받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재해 처벌 법안들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선 합심해 왔다. 그러니 고용노동부의 변명이 궁색하게, 아직까지도 고 김용균 씨 사망의 책임으로 처벌받은 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5월 8일 어버이날,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철제 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러나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는 인사가 마지막 말이 됐다.

현대중공업 사측, 검찰, 경찰, 노동부는 하나같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노동부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작업 중지가

된 후에도 사측은 작업을 재개하려다가 정규직 활동가들이 반발하자 중단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해자는 20미터 높이에 있는 원통형 출입구의 사다리에 서 이동하다 떨어진 듯하다. 배 상부에서 이동하려고 아래를 쳐다보면 오금이 저린다. 이런 곳을 이동할 때 사람들은 보통 필요 이상으로 힘을 많이 준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해자의 신발은 닳아 있었다. 미끄러질 위험이 컸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강조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도 손상돼 있었고 작업장의 조명은 기준치보다 많이 어두웠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다리에 등받이나 그물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노사 합의로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지만 사측은 사다리 자

체 길이가 7미터 이하라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재해자는 단기 계약직인 물량팀 노동자였다. 사측은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작업지시서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한 용접 작업을 했는데도 안전관리자 한 명 배치되지 않았다.

이렇듯 사고 정황이 명확한데도 검찰과 경찰은 재해자를 부검하려 한다.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검하는 것에 대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큰 철제 블록이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다. 그때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하고, 사측을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회사 안전 상태를 점검했어도 사고가 났을까?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다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사고도 근본 원인은 비슷했다. 재해자가 숨진 곳은 평소에도 협착 위험이 커서 노동자들이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무시했다.

즉시 동일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가 실시돼야 했지만, 노동부는 사고 다음날 저녁까지도 중대재해 발생 장소에 작업 중지 명령서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면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 개악하려고 한다.

얼마 전 팽택항에서 산재로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나는 세

상이 디비질(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없앤다고, 비정규직 없앤다고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자본가들은 항상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은 청문회에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의 행동"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다. 기계도 오작동하는데 노동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일에는 돈이 많이 든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안전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윤 말고 인간의 생명이 중심인 사회를 만들 때 진정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